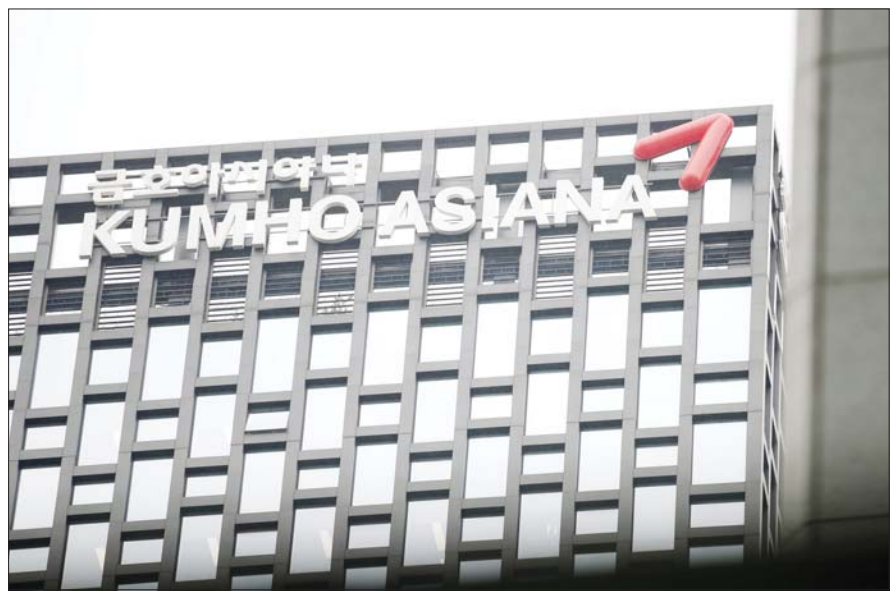
‘아시아나 노딜’ 계약금 소송 본격화… 쟁점은 ‘코로나 탓’?

금호·아시아나, 계약금 몰취 소송
“코로나에 의한 계약 무산” 주장
HDC현산 “아시아나 채무 발견”
유례없던 쟁점에 장기화 전망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뉴시스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간 질권소멸통지 청구 소송이 본격화하며 그 책임 소재 여부는 코로나가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과-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상대로 제기한 인수계약금 관련 질권소멸통지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양측은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이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앞서 현산 컨소시엄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한 본입찰에 참여하며 우선 협상자로 선정돼 약 10개월간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호와 아시아나는 지난해 11월 현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은행 등에 설정된 계약금의 질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인수전 당시 현산 컨소시엄은 총 인수금액 2조5000억 원 가운데 10%인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했는데, 이는 현재 에스크로 계좌에 납입돼 있다. 에스크로 계좌는 일정 조건에 이를 때까지 결제 금액을 예치해두는 계좌를 뜻한다. 금호와 아시아나는 이 계약금을 당사가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승패는 계약 무산의 원인을 코로나로 보는지, 코로나에 의한 계약 미이행의 타당성을 인정하는지 등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금호·아시아나는 현산 컨소시엄이 코로나를 이유로 이번 계약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하지만, 현산 컨소시엄은 아시아나의 재무제표상 문제점 및 재실사 거부 등 계약이 이뤄지지 못한 책임 소재가 금호·아시아나에 있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 관련 재판부에서 코로나를 계약 무산의 원인으로 지목할 경우 현산 컨소시엄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현산 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아시아나의 재무제표를 실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금호·아시아나의 계약금 몰취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현산 측 대리인은 “재무제표상 미공개 채무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아시아나 측 대리인은 “회계기준이 변경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경희대 권재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질권소멸을 정당화할 만한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그걸 MAC(중대한 부정적 변경) 조항이라고 한다”라며 “다만 코로나는 유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을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 본다. 이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이번 질권소멸통지 청구 소송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하지만 이 같은 소송의 경우 통상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에 대한항공과의 인수 합병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8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하며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되찾기 위해 진행했던 소송도 약 9년 만에 결론이 났었다.

이번 질권소멸통지 청구 소송의 2차 변론은 오는 9월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지주사 164개… 손자회사 늘려 지배력 확대

공정위, 지주사 현황 분석·공개
전년 대비 지주사 소폭 감소
증손회사 줄고 손자회사 늘어

지난해 지주회사 수는 164개로 소폭 감소해, 자산요건을 상향했음에도 그 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출자부담이 있는 자회사 대신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12월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 분석은 2021년 지주회사 사업보고를 토대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지주회사는 164개로 전년(167개)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000억원→5000억원으로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반지주회사 3개가 신설되고 6개가 제외됐다. 제외된 사유는 주로 자산총액 감소와 그에 따른 지주회사 제외 신청 등에 따른 것이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는 76개(46.6%)로 전년(82개, 49.1%)보다 그 수와 비중이 모두 감소한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3개에서 46개로 증가했다.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32개로 전년(30개) 대비 2개(반도홀딩스, 아이에스지주) 증가했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은 20개 집단으로 전년 19개 집단보다 1개 증가했다.

지주회사의 소속회사 수는 총 2020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평균 자회사(5.5개), 손자회사(6.2개), 증손회사(0.7개) 수는 전년(자회사 5.4개, 손자회사 5.9개, 증손회사 0.8개)과 비교해 자회사와 손자회사 수가 증가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평균 자회사 수는 10.9개 → 10.3개로 감소한 반면, 평균 손자회사 수는 19.8개 → 20.0개로 증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회사·증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신용희 지주회사과장은 “지주회사 체제가 그룹의 지배구조를 간명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계열 확장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주회사가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계열 확장을 해 나가는 모습 자체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지주회사 체제가 계열 확장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말 시행되는 국내 법 전부개정안 취지에 따라 보다 신중한 출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30일부터 신규전환 지주회사 및 신규 편입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상장사의 경우 20%→30%로, 비상장사는 40%→5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낮은 지분율로 확장함에 따른 소유와 지배의 괴리 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전체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조1598억원이며, 평균 부채비율은 35.3% 수준이다. 일반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55조3490억원(평균 39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1조4000억원(집단별 평균 1조725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이 벤처투자 등 건전한 투자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금성 자산 1조원 이상 보유한 곳은 LG, SK, LS 등 8개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